

일자리 예산 3.9% 삭감… 전력산업 등 직업훈련비 확대

고용부, 올 30조3481억 확정

실업소득·유지·지원 예산 13.4조
고용장려금 17%, 직접일자리 11%
디지털 인재양성 3.7만명으로 늘려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건전재정 기조 속 신산업과 전력산업의 직업훈련 예산이 증가한 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대폭 줄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예산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30조3481억원은 작년 31조5809억원 대비 3.9%(1조23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으로 전체의 44.3%인 13조440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용장려금(5조634억원, 16.7%), 직접일자리(3조

〈2017~2023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일자리 예산(억원)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5,131	315,809	303,481
전년대비 증가율(%)	(8.0)	(13.0)	(17.9)	(20.1)	(19.7)	(3.9)	(△3.9)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4.0 [400.5조]	4.2 [428.5조]	4.5 [470.5조]	5.0 [512.3조]	5.5 [558.0조]	5.2 [607.7조]	4.7 [639.0조]

2244억원, 10.6%), 창업지원(3조1484억원, 10.4%), 직업훈련(2조7301억원, 9.0%), 고용서비스(1조7745억원, 5.8%)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직접 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 규모로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가 확대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됐다.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가 눈에 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은 4163억원으로 지난해 2만9000명에서 올해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

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기차업체 등에 대한 산업전환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8~39.5% 증액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원)’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307억원)’도 각각 신규 도입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 예산이 3506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 장려금이 각 5%~10%,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취·창업 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일경험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원 대폭 확충된다. 또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예산이 266억원으로 확대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조 764억원이 투입되는 등 고용 안전망 확충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가 확대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커진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총 104만4000명) 중 노인일자리는 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1.4만명) 확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령인구 1%p 늘면 재정지출 성장 5.9% ↓

한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지출 효과
합계출산율 0.81까지 떨어지고
65세 이상 인구비중 16.7% 달해

고령화 시대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성장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조사통계월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1년 0.81까지 하락했다. 반면 65세 이상인구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21년 16.7%로 증가했다. 유럽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

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다만 고령층 인구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는 5.9% 감소한다. 고령층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은 ▲노동공급 감소 이외에도 ▲고용의 질 악화 ▲소비 성향의 둔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선 고령층 인구가 증가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고용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체 취업자수(15세 이상)도 2025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은퇴 등의 이유로 취업의사가 약한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로 생산인구가 줄면서 경제 내 총 노동공급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고용의 질 악화로 재정지출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29세는 2000년 65%에서 2021년 62%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은 2000년 30%에서 2021년 36% 증가했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로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드는 반면 은퇴 등으로 취업의사가 약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늘고 있다.

다만 고령층 고용을 보면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이 51.5%,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에 불과하다. 은퇴 등을 통해 퇴직한 이후에 단순일자리 비중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동수요와 소득감소에 따른 수요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도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2년 63%에서 2021년 55.4%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50대는 61.4%→53.9%, 60대는 63.6%→53.2%로 이를 견인했다. 고령층이 은퇴후 단순일자리 등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줄자 미래 소득불안감에 소비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시 고령화 이전과 비교해 더욱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적일 때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HD현대 CES2023 전시관 조감도.

SK ‘2030 넷제로’ 주제 공동전시관 운영

》1면 ‘韓 기업, 초연결’서 계속

LG전자는 전시관 내 ESG존을 별도로 마련해 ‘지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약속’ 등 3가지 테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계획도 선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미니멀 디자인(minimal design)가전’도 선보인다.

◆친환경 기술 대거 공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에너지절감 기술도 대거 공개된다.

SK그룹은 넷제로를 목표로 한 탄소감축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SK 계열사들은 2030년까지 약 2억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아 ‘2030 넷제로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공동 전시관은 CES 행사장(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센트럴 홀에 약 1200㎡ 규모로 구성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8개 SK계열사들이 참가하며, 그룹 계열사 부회장 단도 대거 참석한다.

SK는 두개 구역으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첫 번째 구역은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상을, 두 번째 구역은 SK그룹의 탄소감축 에너지 기술과 솔루션 등으로 구현할 도시 모

습을 보여준다. SK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주제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만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CES에 참가하는HD현대는 친환경 미래 선박의 기술을 공개한다. 정기선HD현대사장도 CES를 찾는다. HD현대는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780㎡ 전시관을 꾸리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인 ‘엠비전 TO’와 ‘엠비전 HI’ 등의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 엠비전 TO는 전동화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다. 차량의 전, 후측면에 위치하는 4개의 기둥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와 e-코너 모듈, MR(혼합현실)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을 융합했다. 엠비전 TO 내부에는 PBV에 걸맞게 접거나 회전이 가능한 좌석이 탑재된다. 엠비전 HI는 레저와 휴식, 아웃도어 목적에 맞게 개발된 PBV이다. 차량유리를 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中 당국, 내수회복 절실… 소비여력 확대에 정책지원

》1면 ‘2023 차이나 기상도’서 계속

후베이성과 쓰촨성의 감염률은 70% 안팎으로, 베이징과 허베이성, 충칭 등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 이동 제한을 풀었지만 지하철 승객 수, 교통혼잡지수 등 이동성 지표는 이전보다 악화됐다.

중타이증권 리원레이 수석이코노미

스트는 “소비를 되살리고 확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 성장은 둔화되면서 사람들은 저축만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루팅 중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3년간 많은 중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면서 재정 상황이 심각하

게 악화됐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바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수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 등 경기 둔화로 대외수요가 부진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0%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